

법교육의 교육과정 구성기준에 관한 시론

박 상 준

(강원대학교 강사)

《요약》

이 논문은 법교육이 다차원적인 법적 시민성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루어야 할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과 구성기준에 대하여 시험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법교육이 법적 시민성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법교육의 교육과정은 지식, 기능·실천, 가치·태도 등 다차원적인 영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법교육의 지적 영역에는 법의 이념, 법치주의, 인권, 기본권, 분쟁해결, 법문화 등 6가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기능 및 실천의 영역은 인지적 능력, 의사소통능력, 사회적 실천 등으로 분류되고, 가치 및 태도의 영역에는 법적 가치-자유, 평등, 정의 등-, 법치주의, 인권 존중, 준법 태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법교육의 다차원적인 영역을 반영하기 위한 법교육의 내용 구성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법적 사례의 제시, (2)법적 쟁점에 관한 토론문제의 제시, (3)관련된 법적 개념과 원리, 관련 자료의 제시, (4)법 집행과정 또는 법적 분쟁의 해결과정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의 제공, (5)법 집행과정의 체험에 대한 반성과 토론문제의 제시, (6)수행평가의 방법 제시

주제어 : 법적 시민성, 법치주의, 법의식, 사례중심 토론수업

I. 문제 제기

사회과 교육의 한 분야로서 법교육은 법치주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시민성은 단지 법적 지식을 획득한 상태가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서 사회적 행위 또는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에 대부분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교육의 교육과정은 주로 법학의 이론적 체계에 의거한 법률적 지식·법적 개념과 원리, 이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다. 그동안 우리의 법교육은 정치교육의 한 분야로 생각되어 왔고, 법교육의 내용은 “시민생활과 법” 단원에서 법의 이념, 시민의 권리와 의무, 분쟁의 발생과 해결 등 주요한 법률적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

다. 하지만 민주정치가 안정화되고 법치주의가 일반화되어 가면서, 교육부 관료와 사회과 교육자들이 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7차 교육과정에서 법교육은 「법과 사회」라는 과목으로 독립되었다.¹⁾

하지만 법교육의 내용은 여전히 법학 개론의 수준에서 광범위한 법률적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현재의 법교육은 법학적 지식을 전달하는데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법적 문제해결능력, 준법 태도, 법률생활에의 참여 등을 육성하는데 한계를 지녔다. 한마디로 현재 우리나라 법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심각하게 괴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전히 법교육 교과서는 법학의 기본 구조에 의거해 법학적 지식을 진술하는 형태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법교육이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면 법교육이 단지 추상적인 법률적 지식이 아니라 법적 분쟁의 해결능력, 법률생활에의 참여, 법적 가치에 대한 신념, 준법 태도 같은 법적 시민성을 효과적으로 육성하려면, 법교육의 교육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이 논문에서는 법교육의 목표에 기초하여 법교육의 교육과정 구성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Ⅱ. 법교육의 목표와 내용

1. 법교육의 정의와 목표

초·중등학교에서 법에 대한 교육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법교육은 법대처럼 법학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 -즉, 법률에 대한 교육- 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법교육 운동이 일어나면서, 법교육은 법대처럼 아마추어 법률가를 양성하거나 법률적 경력을 쌓게 하려고 의도된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시민의 자질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즉, 법교육은 학생들에게 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 법의 제정과 집행 과정을 가르침으로써 시민성을 기르도록 계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최근에 법교육은 “학생이 법치주의에 기초한 민주사회에서 효율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를 육성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ABA,1995:2). 다시 말하면, 법교육은 학생들에게 단지 추상적인 법률적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법적 사례를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법적 개념과 원리의 이해, 법적 문제해결능력, 법적 가치에 대한 신념, 준법 태도, 법률생활에의 참여 등을 가르쳐야 한다. 이와같이 법교육이

1) 제7차교육과정에서 「법과 사회」 교과서는 2002년 처음 제작되었고, 2003학년도부터 전국 고등학교 2, 3학년에서 사회과의 선택과목으로 실시되고 있다.

목표로 하는 시민의 자질을 “법적 시민성”(法的市民性)이라고 부를 것이다(박상준, 2003b:214).

세계화와 지방화, 다원주의로 특징지워지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시민성이 다중성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²⁾ 현대 법치주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법적 시민성도 다차원성을 갖고 있다. 현대 법치주의 사회도 다원화되고 법률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법률생활에서도 다차원적인 시민성이 요구되고 있다. 다원화되고 복잡한 법치주의 사회에서 시민에게는 단지 법에 대한 지식의 기억과 이해력뿐만 아니라 법적 문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과 분석능력, 법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민주적인 의사소통능력, 법적 문제의 합리적 해결능력, 법치주의에 대한 확신, 법적 가치에 대한 신념, 법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천, 자발적인 법 준수 등 다양한 수준에서의 기능과 실천, 가치 및 태도가 복합적으로 요구된다.

이처럼 법적 시민성은 법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법률생활과 관련된 기능과 실천, 가치 및 태도 등 다차원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법적 시민성의 다차원적인 영역들은 서로 분리된 별개의 것들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다. 이러한 다차원적인 법적 시민성은 실제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법을 준수하는 행위를 선택할 때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상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법교육은 다차원적인 법적 시민성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변호사협회(ABA)의 청소년 시민교육 특별위원회(SCYEC)는 법교육이 “법적 개념의 이해와 법적 사고력뿐만 아니라 의사소통과 사회참여 기능, 입헌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주적 가치의 형성을 목표로 해야한다”고 제안했다(ABA, 1995:2-3, 5-11).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 교육부도 법교육의 목표를 “법에 대한 학습을 통해 법률적 지식을 습득하여 법적 현상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법적 문제와 쟁점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며 정의 실현과 질서 유지라는 법이념에 따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법률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태도를 육성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교육부, 1997:200).

2. 법교육의 내용 분석

그러면 다양한 법적 시민성을 달성하기 위해 제7차 교육과정에서 새로 편성된 법교육 교과서가 실제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그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자: <표 1 참조>

2) 김왕근 교수는 세계화 시대에 보편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추구되면서, 한 시민에게 여러 수준의 다중 시민성(multiple citizenship)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김 교수에 따르면, 세계화 시대에 시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주민(municipal citizen)이면서 한 국가의 국민(national citizen)이고, 동시에 세계공동체(지구촌)의 세계시민(world citizen)이다. 그래서 세계화 시대에 시민에게는 지역주민으로서의 표준, 국민으로서의 표준, 세계시민으로서의 표준이 동시에 요구된다는 것이다(김왕근, 1999:46-47, 54-56).

〈표 1〉제7차 교육과정의 법교육 내용(「법과 사회」 교과서)

대단원	소단원	세 부 주 제	비 고
Ⅰ. 법의 이념과 권리·의무	1.법의 의의와 구조	(1)사회규범과 사회생활, (2)법의 이념, (3)법의 분류	소단원 종료 후 탐구 활동
	2.법의 일반원칙과 법의 적용	(1)법치주의, (2)권리남용금지와 신의성실의 원칙, (3)법의 해석과 적용	
	3.권리와 의무	(1)법률관계와 권리·의무, (2)법치사회와 민주 시민	
Ⅱ. 개인생활과 법	1.권리능력과 미성년자의 권리	(1)권리능력, (2)의사능력과 행위능력, (3)미성년자의 권리 보호	소단원 종료 후 탐구 활동
	2.가족관계와 법	(1)부부간의 법률관계, (2)부모와 자식간의 법률관계, (3)친족관계와 법률, (4)상속과 법률관계	
	3.민법의 기본원리와 법 문제	(1)민법의 기본원리, (2) 부동산 거래와 등기, (3)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Ⅲ. 사회생활과 법	1.학교생활과 법	(1)학교교육과 법, (2)교사의 권리와 의무, (3)학생의 권리와 의무	소단원 종료 후 탐구 활동
	2.여성과 법	(1)여성의 법적 지위, (2)성차별과 성범죄	
	3.소비자의 권리 보호	(1)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2)소비자 보호와 법	
	4.근로자의권리와 법	(1)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2)근로관계법	
	5.환경과 법	(1)환경권, (2) 환경오염 피해와 법적 구제	
Ⅳ. 국가생활과 법	1.기본권의 보장	(1)기본권의 보장, (2)평등권, (3)자유권적 기본권, (4)생활권적 기본권, (5)정치적 기본권, (6)청구권적 기본권	소단원 종료 후 탐구 활동
	2.행정법과 행정구제 제도	(1)행정법의 기본 원리, (2)행정구제 제도	
	3.범죄와 형벌	(1)형법과 범죄 예방, (2)형벌	
	4.재판의 원칙과 절차	(1)사법권의 독립, (2)재판의 2종류와 절차	
	5.국제법과 국제분쟁	(1)국제법과 국제분쟁의 해결, (2)국제연합	
Ⅴ. 법 생활의 발전과 과제	1.법문화와 법의식	(1)한국인의 법의식, (2)법문화의 발전	소단원 종료 후 탐구 활동
	2.법률구조제도와 미래사회의 법	(1)법률구조제도, (2)미래사회의 법	
부 록	헌법, 모의재판 과정, 법률 서식(민사소송·형사소송 양식, 혼인·출생신고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법과 사회」 교과서의 특징을 간략히 분석해 보면, 첫째로, 법교육이 기존의 법교육과 달리 「법과 사회」라는 교과목으로 독립되었다는 점이다. 다만 「법과 사회」는 고등학교 2, 3학년에서 선택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래서 법교육이 독립된 과목으로 구성되어서 법교육이 보다 충실하게 실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하지만 학생들과 교사들이 대체로 “법교육이 어렵고 재미없는 과목이라”는 선입견을 갖는 상황을 고려할 때(한국청소년개발원, 1995:29), 학생들이 「법과 사회」 과목을 별로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그에 따라 법교육이 실시될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

둘째로, 「법과 사회」 교과서는 본래의 의도와 달리 법학의 이론적 체계에 의거해 법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교육의 내용 중 “Ⅲ 사회생활과 법” 단원에서는 제6차 교육과정과 달리 가족, 학교, 사회, 국가 등 삶의 영역을 확대해가면서 학생과 교사, 여성, 소비자,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로 구성하였다는 점에서는 한층 발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법교육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법학 개론의 수준에서 광범위한 법학적 지식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더구나 법학적 지식들은 대부분 추상적인 법의 개념과 원리를 너무 간략하게 그리고 무미건조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술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법교육의 내용은 실생활과 연관된 사례와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하려는 의도와 달리, 법학의 이론적 구조에 따라 추상적인 법의 개념과 원리, 이론들에 관한 간략한 진술로 구성되어 있다(김범주 외, 2002).

셋째로, 각 소단원의 끝 부분에 관련된 사례 또는 판례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토론문제를 제시하는 “탐구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에서 배운 법적 개념과 원리를 실제의 법률생활에 적용하고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하여 토론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 교육과정의 구성이 제6차 교육과정보다 한층 더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넷째로, 대단원을 정리하는 부분에서 법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탐구문제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비록 5개 단원의 정리 부분에서만 탐구문제와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런 탐구문제와 자료는 학생들이 법률적 지식을 실제의 법률생활에 적용하고 법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수행평가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사회」의 교육내용 구성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법교육의 내용이 여전히 목표와 크게 괴리되어 있다. 법교육의 목표는 추상적인 법률적 지식의 습득보다는 법적 문제의 해결, 법 준수, 법률생활에의 참여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법교육의 내용은 법학의 이론적 체계에 따라 법률적 지식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에 따라 법교육은 주로 법률적 지식을 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박상준, 2003a:178). 따라서 법률적 지식 중심의 법 교과서와 강의식 수업은 법적 문제의 해결, 법 준수, 법률생활에의 참여 같은 법적 시민성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둘째로, 추상적인 법의 개념과 원리로 구성된 법교육의 내용은 학생들의 흥미, 실제의 법

를생활에서의 필요와 유용성과 커다란 간격(gap)을 보이고 있다. 법의 개념과 원리, 이론들은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서 간략히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시민들에게 일상적인 법률 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법률행위를 지시해 줄 수 없다. 법의 개념과 원리, 법 규정은 매우 추상적이고 난해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암기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의 법률생활에서 법에 규정된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기는 어렵다. 많은 경험적인 연구들은 학생들에게 추상적인 지식-법률적 지식을 포함하여-을 전달해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의 생활에서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박상준, 2002:69-75). 추상적인 법률적 지식을 많이 습득한 시민이 실제의 법률생활에서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거나 법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로, 소단원의 끝 부분에서 토론수업을 할 수 있는 “탐구활동”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제시된 사례 또는 판례가 너무 간략하게 진술되어 있어서 추상적인 법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또한 주어진 사례에 대한 토론문제도 그 사례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그와 관련된 법적 개념과 원리, 법 규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탐구활동이 주어진 사례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부각시키고 관련된 법적 개념과 원리, 법 규정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결국 토론은 학생들의 잡다한 의견을 쏟아놓고 타당한 법적 결론을 얻지 못하고 끝날 가능성이 많은 것 같다.

Ⅲ. 법교육 교육과정의 영역과 구성기준

1. 법교육의 교육과정 선정의 원천

앞에서 언급했듯이, 법치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고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법교육은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법적 분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교육에 흥미를 갖고 참여하도록 만들기 위해, 법교육의 교육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기존의 법교육은 법학의 이론적 체계에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근거를 찾았다. 즉, 법교육의 교육과정은 법학의 이론적 체계에 따라 주요한 법의 개념과 원리, 이론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법교육이 법학의 이론적 체계에 의거한 법률적 지식-주요 법적 개념과 원리, 이론-을 학습함으로써 법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2장에서 지적했듯이, 법학 개

론의 수준에서 선정된 추상적인 법의 개념과 원리는 실제의 법률생활에서 구체적인 법률행위를 지시해줄 수 없고,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일상적인 법률생활에서 법적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법적 시민성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필요와 흥미, 일상적인 법률생활에서의 필요와 유용성에 의거하여 법교육의 내용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실제의 법률생활에서 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보장되고,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작용하는지 실질적인 도움을 얻기를 원한다. 또한 우리 사회는 부정적인 법의식을 극복하고 법치주의 전통을 확립해야 할 사회적 요구에 직면해 있고, 그에 따라 다차원적인 시민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학생의 흥미와 필요, 우리 사회의 필요와 유용성에 의거하여 법교육의 교육과정을 선정하고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학생의 흥미, 일상생활의 필요와 유용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은 듀이(J. Dewey)이후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듀이가 주장했듯이, 교육의 목적은 자연에서 그 원천을 찾을 수 있는데, 교육 목적으로서의 자연적 발달은 학생의 개인 차이를 존중하고 학생의 흥미와 필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암시해준다(Dewey, 1952: IX-§1, 10-11, pp.174, 181-182). 또한 사회적 삶이 곧 성장이고 교육은 성장을 보장하는 조건을 제공해준다. 사회적 삶은 그 자체의 내재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교육은 그 삶의 의미를 실현하는데 있다(Dewey, 1952: IV-§23, p.85). 교육은 새로운 세대들에게 사회의 목적과 관습에 입문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사회적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새로운 세대들에게 사회의 이상, 표준, 관습 등을 전달해 주는 과정이 없다면, 사회적 삶은 존속할 수 없다. 이것이 교육의 필연성이다(Dewey, 1952: I-§6~7, p.12-13).

그런데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아동의 흥미와 능력, 어른들의 관심사 사이의 간격은 점점 더 커진다. 이제 어른들이 하는 일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배우는 것이 더 어렵게 된다. 어른들이 하는 일은 대부분 공간적으로 아동의 세계와 멀리 떨어져 있고, 역할놀이에 의한 모방으로는 제대로 배우기 어렵게 된다. 어른의 활동에 참여하는 능력은 의식적인 목적으로 실시되는 형식적인 교육에 의존하게 된다. 그래서 의도적인 교육기관, 학교와 교제가 고안되고, 그것들을 가르치는 일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위임되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적인 교육 없이는 복잡한 사회의 자원과 업적을 새로운 세대들에게 전달할 수 없다(Dewey, 1952: I-§18-19, p.18-19).

이런 측면에서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흥미, 사회생활에서의 필요와 유용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마찬가지로 법교육의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흥미와 필요, 우리 사회의 법률생활에서의 필요와 유용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부정적인 법의식을 개선하고 법치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

추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법교육이 본래의 목표대로 다차원적인 법적 시민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법교육이 목표로 하는 법적 시민성의 핵심은 법학의 이론적 체계에 의거한 법률적 지식의 습득이라기 보다는 실제의 법률생활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법률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법률적 지식은 후자를 위해 필요한 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법학의 이론적 체계에 따라 선정된 법률적 지식이 일상적인 법률생활에서의 법적 분쟁의 해결, 법 준수, 법률생활에의 참여 등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초·중등학교의 법교육에서 굳이 추상적이고 어려운 법률적 지식을 가르쳐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법학의 이론적 체계에 따라 선정된 법률적 지식을 중심으로 구성된 법교육의 내용은 학생들에게 “법은 어렵고 재미없으며 자신의 삶과 별로 관계없다”라는 선입견을 갖게 만든다. 법교육의 내용이 법학 개론의 수준에서 추상적이고 난해한 법률적 지식으로 조직된다면, 학생들은 법이 자신의 일상생활과 무관하다고 느끼게 되고, 결국 법교육에 흥미를 잃고 참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법교육은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증가되는 법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법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시민을 기를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중·고등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법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법교육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88.0%), 그 이유로는 “법교육의 내용이 개념과 이론 중심으로 구성되어 어렵거나”(44.5%) “실생활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39.1%)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학교의 법교육이 법적 문제의 해결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60.0%)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5:29). 그러므로 초·중등학교의 법교육 교육과정은 법학의 이론적 체계보다는 학생의 흥미와 일상적인 법률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최소한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2. 법교육 교육과정의 영역과 구성기준

법교육이 단지 추상적인 법률적 지식이 아니라 법적 분쟁의 해결능력, 법적 가치에 대한 신념, 자발적인 법 준수, 법률생활에의 참여 같은 법적 시민성의 육성을 목표로 한다면, 법교육의 교육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법적 시민성의 다차원성을 고려할 때, 법교육의 교육과정은 지식, 기능·실천, 가치·태도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각 영역별로 법교육의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가. 지식의 영역

시민들이 다차원적인 법적 시민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법률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의 개념과 원리, 법규정에 대하여 알아야한다. 그래서 미국변호사협회는 법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주요 개념과 원리로 “법, 정의, 권력, 평등, 재산권, 자유”등을 제시했다(ABA,1995:3). 미국 변호사협회가 법교육의 내용을 크게 6가지로 제시한 것은 미국사회는 이미 법치주의, 권력분립, 지방자치의 전통이 확립되어 있고, 분쟁의 법적 해결과 준법 태도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사실은 미국의 민주정치에 대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의 연구에서 잘 드러난다. 토크빌에 따르면, 미국사회에는 유럽처럼 강력한 중앙정부가 없었지만 반면에 성문법이 존재하여 그법이 일상생활을 지배하였다. 그래서 사회의 모든 일들은 규칙적으로 움직여갔다(Tocqueville,1990: I-70). 미국인이 자유를 누렸던 근본적 원천은 공적인 일에의 참여, 권력기관의 책임있는 행정, 개인의 자유 보장, 배심원에 의한 재판에 놓여있었다. 그런 관행들은 유럽에서는 불완전하게 시행되지만, 미국에서는 “법에 의해” 승인되고 확립되었다(1990: I-39). 또한 지방자치는 미국의 자발적 문화에 적합한 제도였다. 시민들은 지방자치의 이름으로 법에 의해 자유롭게 결사체를 형성하고 유지하였다. 법으로 보장된 시민들의 결사체들은 개인과 국가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면서 사적 시민들에게 진리를 전수해주고, 모범적인 사례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북돋아줌으로써 개인의 사적 이해관심과 사회의 공동선을 융합시키는 역할을 했다(1990: II-106).

토크빌이 지적했듯이, 미국사회에는 자발적 결사체들이 국가권력의 집중과 그로 인한 폐해를 저지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었다. 즉, 자발적 결사체들은 전체적인 국가권력이 공허한 공익을 내세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비판하고 견제해왔다. 이러한 자발적 결사체들의 활동은 시민들이 법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고 법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태도를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과 법문화는 미국과 전혀 다르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유교적 전통의 법 개념과 서구의 법 개념 사이의 괴리, 일본의 식민지 통치 수단으로서의 근대적인 법의 제정, 독재와 권력의 연장을 위한 헌법의 잦은 개정,³⁾ 사법기관의 불공정

3) 우리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이후 9차례 개정 또는 제정되었다. 이승만 정권에서 2차례(1952, 1954년) 개정되었고, 4·19혁명 후에 2차례 개정되었고(1960년 5, 11월), 5·16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 정권에서 3차례 개정 또는 제정되었고(1961,1969,1972년), 12·12군사쿠데타 이후 전두환정권이 1차례 개정하였고(1980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1987년 10월 27일 여·야 합의로 개정된 헌법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한 법집행 등으로 인해 법치주의와 준법 태도가 정착되지 못했다(박상준, 2003a:177).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불법을 지행했고, 법률을 초월하여 시민의 인권을 탄압해왔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는 외면적으로 법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법치주의가 정착되지 못하였고 법 집행기관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법의식”이 널리 퍼져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전국의 시민 1200명을 대상으로 법의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78.9%), 그 원인은 “법의 질차가 복잡하고”(32.5%), “법 집행이 엄정하지 못하며”(24.9%), “법이 불공평하고”(21.3%),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기 때문”(11.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반수 이상의 국민이 법이 권위적이거나(30.3%) 편파적이라(24.95)고 인식하였고,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 몰인정하거나(24.5%) 불쾌하다(24.2%)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인 법의식은 초·중등학교에서의 법교육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68.8%) 형성된 것이라고 생각했다(한국법제연구원, 1994:34-58, 73-133).

이렇게 부정적인 법의식은 학생들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중·고등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법의식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많은 학생들이 “법은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으며”(55.8%), “사법기관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 주지 못하고”(53.7%), “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 존경받지 못한다”(60.2%)고 생각하였다. 또한 80% 이상의 학생들이 법보다 돈이나 권력이 더 위력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5:30-32).

이처럼 법치주의의 전통이 확립되고 법에 대한 긍정적 의식이 형성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법치주의 전통이 뿌리내리지 못했고, 부정적인 법의식이 널리 퍼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교육이 모두 법적 시민성의 육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지라도, 법교육의 내용은 달라야 할 것이다. 법교육의 내용은 사회적 상황, 정치제도, 법문화 등을 고려하여 편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법교육에서는 “법치주의, 법문화, 분쟁해결” 부분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미국변호사협회에서 제시했던 “권력” 관련 내용-권력의 개념, 정부의 목적과 기능, 정부형태와 역할, 시민과 정부의 관계 등-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정치과목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법교육에서 중복해서 가르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정의”는 법의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법의 이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내용 영역으로 편성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한 “자유, 평등”은 기본권의 중요한 내용이면서 서로 충돌하는 권리이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서로 보완해주는 권리이다. 자유의 폐해와 평등의 보장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연속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유, 평등”은 독립된 내용 영역으로 구성하기보다는 “기본권”이란 내용에 통합하여 다루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교육이 다차원적인 법적 시민성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법학의 이론적 체계에서 도출된 개념과 원리, 이론들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의 흥미, 일상적인

법률생활의 필요와 유용성에서 요구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법교육의 교육과정은 법학에 대한 이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보다는 일상적인 법률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법적 가치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시민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법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내용 영역과 세부 주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1) 법의 이념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모두 법에 의한 지배를 그 원리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치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에 의해 보장된다. 옳음 또는 정의는 법 규정과 법 집행을 통해 최종적으로 판정된다. 따라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의 기본 성격에 대해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법의 근본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다. 법의 이념은 법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기준이 되므로, 학생들은 구체적인 법의 개념과 원리를 배우기 전에 법의 이념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구나 법이념 각각은 모두 중요한 가치(이상)이지만 현실에서는 어느 하나의 가치만을 충족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법이념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법 이념 상호간에 갈등이 발생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 해결하는지에 대해 이해시키는 것이 법치주의의 확신과 준법 태도의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법 자체가 추상적이며 난해하고, 많은 학생들이 법교육을 미래의 사회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법교육의 정의, 목표, 의의를 법 교과서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교육이 단지 법률적 지식의 전달이나 법률에 대한 암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법적 시민성을 육성하는 것이란 점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법의 이념> 영역에서는 법교육의 정의와 목표, 법의 의미와 기능, 법의 이념, 법 이념의 상호 갈등, 관련 사례 또는 판례 등에 대하여 가르쳐야 할 것이다.

2) 법치주의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는 법치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여전히 독재와 불공정한 법 집행의 관행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못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사법기관에 대해 불신하고 부정적인 법의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교육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확신, 긍정적인 법의식, 준법 태도를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사회를 만들려면, 무엇보다도 법치주의가 정착되어야 한다.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법의 본래 목적대로 개인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사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국가기관은 법에 의거해 행정을 처리하고 사법기관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면, 시민들은 법규정과 사법기관을 신뢰하고 자발적으로 법을 지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또한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원리로서 강조되고, 국가행정을 예측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지속시키는 데 기여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은 시민들에게 행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다른 시민의 침해로부터 자기의 자유를 보호해준다. 또한 법은 시민의 자유 행사가 어느 선까지 허용되는지를 규율함으로써 누가 어떤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가를 규율한다. 이처럼 법은 모두가 인정할 만한 방식으로 각자의 욕구충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자 한다(Zippelius, 1965:39,45) 그러므로 법치국가에서 모든 시민이 자유사용의 규율로서 그리고 이해관계 조정의 규율로서의 법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자발적으로 준수할 때, 법은 공정한 사회질서를 안정적으로 지속시키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법교육에서 법치주의를 독립된 내용 영역으로 다루는 것이 요구된다. <법치주의> 영역에는 “관련 사례 또는 판례”, 법치주의의 개념, 법치주의의 역사, 법치주의의 실현방식 등이 포함될 수 있다.

3) 인 권

세계화 시대에는 시민에게 주어지는 기본권 이전에 자연인에게 부여된 인권에 대해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권(人權)은 한 국가의 구성원인 시민(市民)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인간(人間)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과 시민의 자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기본권과 인권의 구분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다국적 기업이 급증하고 있고, 불법적인 이민자로나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외국근로자나 불법체류 외국근로자들은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설정법상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없고 결국 인권에 호소할 수 밖에 없다.⁴⁾ 최근 우리나라에도 외국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체류하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실업으로 노숙자들이 급증하고, 각종 재해로 인해 후천적으로 장애우가 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 인권교육을 통해 시민들은

4) 가수 유승준이 법무부의 입국금지조치에 대해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승준이 한국시민이 아니라 미국시민이므로 외국인인 우리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입국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승준의 입국금지조치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선정했다(동아일보, 2003.7.29).

부지불식간에 사회적 약자나 외국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인권침해를 방조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인권교육은 외국근로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없는 평등사회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실천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법교육에서 ‘인권’을 하나의 내용 영역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 영역은 기존의 법 교육과정처럼 세계인권선언서나 헌법에 규정된 인권의 종류와 의미에 대하여 단순히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생활의 각 영역” 즉, 가정-학교-직장-지역사회-국가 순으로 확대하면서 각 영역과 관련된 기본권의 종류와 의미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구성하고 서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권> 영역에는 “관련 사례 또는 판례”, 인권의 개념, 인권과 시민권의 구분, “가정-학교-직장-지역사회-국가 영역에서의 기본권의 보장”, 세계화와 인권의 중요성, 외국근로자와 인권, 다국적 기업과 인권, 사회적 약자와 인권, 세계인권선언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주요 조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4) 기본권

법의 근본적 목적은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법규정과 법집행을 통해 보장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치사회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법을 일반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법에 규정된 기본권에 대해 모른다면, 자신의 기본권을 충분히 누릴 수 없다. 정의 또는 권리의 원리는 그것이 옳고 타당한 것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질 때, 실제로 법이 되고 지켜질 수 있다. 헤겔이 비유했던 것처럼, 시민들이 법을 알지 못하도록 법전을 숨겨두는 것은 그 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법전을 도서관의 창고 속에 묻어두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Hegel, 1953: §215 remark).

따라서 법치주의 사회에서 각 시민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찾고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법에 보장된 자신의 자유와 권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자기 권리를 찾는 방법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법교육에서 시민의 기본권에 대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본권> 영역은 기존의 법 교육과정처럼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의 종류와 의미에 대하여 무비간조하게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생활의 각 영역” 즉, 가정-학교-직장-지역사회-국가 순으로 확대하면서 각 영역과 관련된 기본권의 종류와 의미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구성하고 서술해야 할 것이다. 이런 <기본권> 영역에는 “관련 사례 또는 판례”, 기본권의 의미, 기본권의 발달사, “가정-학교-직장-지역사회-국가 영역에서의 기본권의 보장”, 기본권의 실현방법, 헌법 및 주요 법률 조항, 기본권 침해의 구제방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5) 분쟁 해결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면서, 다원화된 사회생활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 많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서로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불가피하게 법적인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이런 법적 분쟁은 개인간의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경향이 증가하면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에 호소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시민들이 법적 분쟁의 해결방식과 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다면, 법적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소송에 이르지 않고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할 절차와 방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도 많다. 개인간 또는 집단간의 이익갈등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해결되거나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국가는 법을 공정하게 집행할 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과 법적 절차를 사전에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법교육이 분쟁의 해결절차와 방법에 대해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법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면, 그 법이 모든 시민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야 한다. 아무리 정의롭고 좋은 법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법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방치해둔다면, 그 법은 다양한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고,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없게 된다(박상준, 2003a:175-176).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지만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이 베일에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법의 제정과 집행과정을 잘 알지 못하는 형편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추상적이고 난해한 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법의 제정 및 집행과정, 법의 내용이 일반 시민들에게 감추어져 있다면, 법은 본래의 목적과 달리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법률생활의 각 영역에서 분쟁을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교육은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사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법적으로 행동하는 태도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분쟁해결> 영역은 기존의 법 교육과정처럼 공법 또는 사법상 구제 방법과 구제제도에 대하여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생활의 각 영역” 즉, 가정-학교-직장-지역사회-국가 순으로 확대하면서 각 영역에서 종종 발생하는 분쟁들과 그것의 해결방법, 그리고 관련된 주요 법의 개념과 원리,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구성하고 서술해야 할 것이다. <분쟁해결> 영역에는 “관련 사례 또는 판례”, 법적 분쟁의 사례와 해결방법, “가정-학교-직장-

지역사회-국가 영역에서의 분쟁해결 방법”, 관련된 주요 법의 개념과 원리, 권리와 의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6) 법문화

법치주의 문화가 자생적으로 확립된 서구사회와 달리,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와 긍정적인 법문화가 정착되지 못했다. 우리나라에는 법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의식이 형성되지 않았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 시민의 기본적인 소양이라는 문화가 확립되지 못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법의식은 법에 대한 관념이나 법의식 형성의 사회적 배경이란 측면에서 서구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박성혁, 2003:240-244). 서구사회는 이상적인 사회질서의 상태를 정의로 간주하고, 법을 정의실현의 방법이나 절차로 이해하였다.⁵⁾ 서구사회에서 법 관념은 다른 도덕이나 관습과 독립적인 개념으로 형성되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유교-특히 성리학-의 영향을 받아 이상적인 사회질서의 상태를 예(禮)의 실현으로 믿고, 법률을 예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적으로 간주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성리학의 전통에서 법률을 도덕규범이나 예절의 실현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이해하였다. 성리학적 전통이 지배하던 우리사회에서 법은 도덕규범이나 예절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그것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의 성격이 강했다. 이런 법 관념은 예주법종(禮主法從), 덕주형보(德主刑輔), 법본호예(法本乎禮) 같은 전통적인 유교 사상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최종고, 1989:82-86).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법문화는 유교의 영향으로 예치주의(禮治主義) 또는 덕치주의(德治主義)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이런 예치주의 법문화는 전통적인 농경사회에 적합했는지 모르지만,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제한하는 법치주의의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 지배, 장기간의 독재, 독재권력의 잦은 헌법 개정, 권위주의적 정부의 불공정한 법집행 등을 겪으면서, 많은 시민들이 사법기관을 불신하고 부정적인 법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법 규정과 법 준수 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생겼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법제연구원의 조사결과는 우리나라 시민들이 대부분 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그에 따라 법을 준수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⁶⁾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민들이 “경찰이 사건을 공

5) 영어에서 정의(justice)는 “옳은 상태”뿐만 아니라 옳음을 판단하고 적용하는 “재판 또는 재판관”의 의미도 갖고 있다.

6) 우리나라 법의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법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에 대한 친근감이 부족한 편이다. (2)법을 알아야 한다는 관념은 강하지만 구체적인 노력이 별로 없는 편이다. (3)타인의 탈법행위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지만 타인의 권리존중의식이 약하다. (4)자연법적 사고보다는 실정법적 사고가 강해져 가고 있다. (5)급전관계와 무관한

정하게 처리하지 않고”(76.5%), “검찰은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지 않고”(63.4%), “법원도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는다”(50.0%)고 생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시민들이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고”(80.4%),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서는 법을 위반해도 괜찮고”(85.0%),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법을 위반할 수 밖에 없다”(64.9%)는 태도를 보였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6:<표4-9>, <4-13>).

이와 같이 예치주의 법문화와 부정적인 법의식은 법치주의와 준법태도를 형성하는데 큰 장애가 된다. 이런 부정적인 법문화 속에서 서양의 법 교육과정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법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법교육에서 단지 추상적인 법률적 지식을 가르친다면, 법치주의와 자발적인 법준수 문화를 형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교육에서는 서구사회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법치주의와 법준수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이유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런 부정적인 법문화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정적인 법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이 공정하게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 긍정적인 법의식과 준법 태도를 형성하는 법교육이 요구된다. 법치주의 국가는 다른 정치체제보다 다수의 시민들이 공유한 정의의 이념에 기초해서 법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상을 실현할 가능성이 더 높다. 법치주의가 성공할 수 있는지는 정치문화에 의존한다(Zippelius,1965:142). 법문화는 법치주의가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이런 이유에서 법교육에서 우리의 법문화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문화> 영역에는 법문화의 의미, 우리 법문화의 변천과정, 법의식 조사결과, 우리 법문화의 문제점 해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법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영역과 세부 주제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사건에는 관용적이다. (6)입법과정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편이다. (7)바람직한 법보다는 현실적으로 지키기 쉬운 법의 제정을 원한다(한국법제연구원,1994:64-65).

〈표 2〉 법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영역과 세부 주제

내용 영역	세 부 주 제
법의 이념	“법교육의 정의와 목표”, 법의 의미와 역할, 법의 이념, 법 이념의 상호갈등 등
법치주의	“관련 사례 또는 판례”, 법치주의의 개념, 법치주의의 역사, 법치주의의 실현방식 등
인 권	“관련 사례 또는 판례”, 인권의 개념, 인권과 시민권의 구분, “가정 학교 직장 지역 사회-국가 영역에서의 기본권의 보장”, 세계화와 인권의 중요성, 외국 근로자와 인권, 다국적 기업과 인권, 사회적 약자와 인권 등
기본권	“관련 사례 또는 판례”, 기본권의 의미, 기본권의 발달사,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 국가 영역에서의 기본권의 보장”, 기본권의 실현방법, 헌법 및 주요 법률 조항, 기본권 침해의 구제방법 등
분쟁해결	“관련 사례 또는 판례”, 법적 분쟁의 사례와 해결방법, “가정-학교-직장-지역사회-국가 영역에서의 분쟁해결 방법”, 관련된 주요 법의 개념과 원리, 권리와 의무 등
법문화	“관련 사례 또는 판례”, 법문화의 의미, 우리 법문화의 변천과정, 법의식 조사결과, 우리 법문화의 문제점 해결 등
주요 자료	헌법, 민법, 형법, 세계인권선언서, 관련 판례, 각종 법률서식 견본 등

이제 법교육의 내용을 구성하는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자. 첫째로, 법교육의 목표인 법적 시민성의 다차원성을 고려할 때, 법교육의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근거는 법학의 이론적 체계보다는 학생들의 흥미, 일상적인 법률생활에서의 필요와 유용성에서 찾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즉, 법교육의 지적 영역은 법학의 이론적 체계에 의거한 기본 개념과 원리, 이론들보다는 실제의 법률생활에서 법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 기존의 법교육 교과서처럼 <기본권>을 국가생활의 한 영역으로 분류해서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의 종류-평등권, 자유권, 생존권, 정치권, 청구권-와 의미를 무미건조하게 간략히 서술하는 방식이 아니라(김범주 외, 2002:116-137), 먼저 학생들이 흥미를 갖는 구체적인 사례 또는 판례를 제시하면서 기본권이 일상적인 법률생활의 각 영역에서 어떻게 규정되고 보장되는지를 이해시키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기본권의 내용은 “가정-학교-직장-지역사회-국가 순으로 법률생활의 영역”을 확대해가면서 각 영역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종합적으로” 알려주는 형태로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법교육의 지적 영역을 구성하는 것이 법학의 이론적 체계에 의거해 법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보다 다차원적인 법적 시민성을 육성하는데 더 효과적인 것이다.

- 7) 사회과의 교육과정은 일반적으로 공동체 확장법이나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 공동체 확장법은 내용의 계열을 아동-가족-학교-이웃-지역-국가-세계로 공동체와 활동범위를 확장해가면서 그 공동체속에서 이뤄지는 기본적 인간활동으로 구성하는 것이다(Lemlech, 1990:287-289, Banks, 1990:10-14).

둘째로, 법교육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먼저 구체적인 사례 또는 판례를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토론하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법적 개념과 원리에 대하여 이해하는 형태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즉, 법교육의 교육과정은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박상준, 2003b:215-224). 사례중심의 토론수업으로 구성된 법교육의 내용은 학생들이 추상적인 법의 개념과 원리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그것들이 실제의 법률생활에서 어떻게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적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근거가 되는지를 인식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실제로 경험적인 연구들은 법교육에서 사례중심의 토론수업이 강의식 수업보다 법과 관련된 인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법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의 형성에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이철희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법교육에서 사례 또는 판례 중심의 토론수업이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보다 고급사고력을 향상시키는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중심의 토론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법적 문제들을 이해하는 능력과 법적 사고능력이 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철희, 2002:46-51). 또한 조효남의 연구결과는 법교육에서 사례중심의 교수·학습방법이 법에 대한 이해도와 법적 신뢰감을 높이고, 법률의 활용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조효남, 1996:62-69).

그런데 이 논문에서 제시한 법교육의 지적 영역은 기존의 법 교육과정과 별로 다른 것이 없지 않느냐고 비판할 수 있다. 얼핏보면 법교육의 지적 영역에 포함될 내용은 유사하다. 그러나 기존의 법 교육과정은 법학의 이론적 체계에 의거해 광범위한 법적 개념과 원리,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이 논문은 법 교육과정을 학생의 흥미, 일상적인 법률생활에서의 필요와 유용성에 근거하여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시민을 기르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최소한의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 따른 경우, 기존의 「법과 사회」 교과서에 포함된 법의 분류, 국제법과 국제분쟁의 해결, 국제연합 등의 주제는 중·고등학교의 법교육에서 다루지 않아도 될 것이다.

다차원적인 법적 시민성을 육성하기 위해 법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핵심적인 개념과 원리가 있기 때문에, 법교육의 내용 영역과 주제는 어느정도 유사할 수 있다. 하지만 법 교육과정의 구성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 영역과 주제를 선정할 것인가 보다는 그 내용 영역과 주제를 “어떻게” 구성하고 서술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기존의 법 교육과정은 법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 권리와 의무들을 법학 개념의 수준에서 부미건조하게 간략히 설명하고, 단지소단원의 끝 부분에서 “탐구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법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법은 어렵고 재미없으며 실제의 법률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어 법교육에 대한 흥미와 참여를 떨어뜨려서, 결국 법적 시민성을 기르는데 한계를 드러낼 것이다.

나. 기능 및 실천의 영역

전통적으로 법교육은 법학의 이론적 체계에 의거한 법률적 지식과 법규정을 가르치는 교과교육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그런 추상적인 법률적 지식이 실제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법을 준수하는 행위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최근 법교육은 추상적인 법률적 지식보다는 법적 문제의 해결, 법적 가치에 대한 신념, 자발적인 법 준수, 법률생활에의 참여 같은 법적 시민성의 육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반화되고 있다.

법교육이 다차원적인 법적 시민성의 육성을 목표로 한다면, 교육내용에는 법의 개념과 원리의 이해뿐만 아니라 법적 문제의 해결능력, 준법태도, 사회적 실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교육의 목표를 고려할 때, 법교육은 전자보다는 후자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과 교육에서는 교육과정의 영역을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 사회참여 또는 사회적 행위 등 4가지로 구분해왔다(Banks, 1990:4-7, 차경수, 1997:53-55).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법교육의 교육과정을 지식, 기능 및 실천, 가치 및 태도 3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왜냐하면 법적 기능은 사회적 실천을 위한 필요조건이고 사회적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는 법적 기능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법교육에서 법적 문제의 해결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은 실제의 삶 속에서 법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만약 법적 문제의 해결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법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행위로 실천되지 않으면, 그런 법적 기능은 법교육의 목표로서 무의미하다. 법적 기능과 실천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이 논문에서는 법적 기능과 사회적 실천을 하나의 영역으로 묶어서 다루고자 한다.

법교육에서는 법적 문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인지적 능력과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능력을 육성하고,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그런 기능과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교육 교과서는 추상적인 법률적 지식이나 법조항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적 문제(사례)를 먼저 제시하고 그 문제와 연관된 쟁점과 토론문제를 제시하여 토론수업을 유도해야 한다. 그 다음에 관련된 법 개념과 원리를 제시하고 실제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법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기능과 실천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1) 인지적 능력

초·중등학교의 법교육에서 법의 개념과 원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법적 문제를 정당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이다. 법적 시민성의 핵심은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사회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법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지적 능력이 요구된다. 학생들이 이런 인지적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추상적인 법의 개념과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법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교육은 법적 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지적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법교육이 목표로 하는 인지적 능력에는 법적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 능력, 법적 문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추상적인 법 개념과 원리를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법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인지적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법교육의 내용은 구체적인 법적 문제(사례)를 제시하고 법적 쟁점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탐구문제로 구성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제시된 법적 쟁점과 관련된 정보를 분석·평가하고, 탐구문제에 대해 토의하는 과정을 통해 법과 관련된 인지적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2) 의사소통능력: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인간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자기이익 추구가 합법적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다양한 욕구와 이해관계는 서로 충돌을 일으키기 쉽다. 이런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이 의사소통을 통해 각자의 입장을 상대방에게 표명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설득하여 이성적인 해결책에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처럼 법적 분쟁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능력이 요구된다.

합리적인 의사소통능력은 대화와 합의를 통해 법적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중요한 능력이다. 그래서 최근에 의사소통능력은 사회과교육의 목표 중 하나로 인정되고(Woolever & Scott, 1988:188-189, Lemlech, 1990:281-282), 특히 법교육에서 법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능력으로 강조되고 있다(ABA, 1995:5, 11).

이러한 의사소통능력은 타인의 관점에서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자기 입장을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은 시민들로 하여금 공동의 이익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태도를 길러주고, 공익을 위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다. 듀이(J. Dewey)가 지적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공유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의사소통은 그것을 공유하는 과정이다. 의사소통과 그에 따른 공유된 이해에 참여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비슷한 지적·정서적 성향을 갖고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해준다(Dewey, 1952: I- §10, p.14). 그래서 사회적 삶이 곧바로 의사소통과 동일한 것이고 의사소통은 교육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의사소통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경험의 확대되고 변화된다는 의미이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어 가지고 그에 따라 자신의 태도를 수정할 수 있다(Dewey, 1952: I- §13, p.16).

3) 사회적 실천:

법교육이 단지 추상적인 법률적 지식의 획득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법적 시민성의 육성을 목표로 한다면, 법교육은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법과 관련된 지식이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곧바로 법을 준수하거나 법률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적 문제의 해결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은 교실에서 토론수업을 통해 어느 정도 향상될 수 있겠지만, “실제의 사회적 상황에서 분리된” 교실수업은 그런 능력이 실제의 삶 속에서 법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행위”로 연결되는 것을 보장하기 어렵다(박상준, 2002: 69-75).

법과 관련된 인지적 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은 그 자체가 법교육의 목표라기 보다는 사회적 실천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학생들이 인지적 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실제의 법률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 집행과정과 법적 문제의 해결과정에 대한 체험이 필요하다. 그러한 사회체험을 못하면, 인지적 능력은 실제의 상황에서 작동하기 어렵다. 인지적 능력의 향상이 실제의 사회생활에서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들이 많이 있다.

지금까지 도덕적 사고와 도덕적 행위의 일치를 입증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왔지만, 아직 도덕적 “사고”가 도덕적 “행위”의 수행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다. 블라시(A. Blasi)가 사고와 행위의 연관성을 확인하려는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도덕적 사고(추론)와 정직의 관계에 대한 17개의 연구들 중에서, 7개의 연구들은 ‘도덕적 추론과 정직한 행위가 관련되어 있다’는 가설을 지지해주었지만, 나머지 7개의 연구들은 그 가설을 부정하였고, 3개의 연구들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그 가설을 지지해주지만,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지지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lasi, 1980: 20).

따라서 법적 문제의 해결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이 실제의 법률생활에서 실천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능력의 실천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체험 프로그램은 추상적인 법학적 지식 중심으로 구성된 법 교육과정보다 다차원적인 법적 시민성을 발달시키는데 더 효과적이다. 또한 그것은 학생들에게 법교육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키고, 실제의 법률생활에서 겪는 법적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길러주는데 효과가 있다. 실제로 경험적인 연구들은 교실에서 추상적인

법률적 지식을 강의하는 것보다는 법의 집행과정에 대한 체험학습이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나아가 법적 시민성을 육성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Knepper, 1997:12, Hunt et al., 1997:40-41).

더구나 법교육에서 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법적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입장을 공감하고 자기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함으로써, 법적 문제에 대해 민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준다. 타인의 입장에 대한 공감능력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주면서 호의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행위-즉, 친사회적 행위(prosocial behavior)-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박성희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통받는 타인의 상황에 대한 공감은 친사회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타인의 상황을 공감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타인의 관점취하기, 타인의 상황 상상하기, 공감정서 등은 친사회적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박성희, 1997:141-142). 또한 타인의 상황에 대한 공감은 학생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공감의 성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성희, 1997:150-152).

그러므로 법과 관련된 인지적 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실제의 삶 속에서 충분히 발휘되려면, 법 집행과정이나 법적 문제의 해결과정에 대한 체험이 필요하다. “한 톤의 이론보다는 한 온스의 경험이 낫다”는 듀이의 말처럼(Dewey, 1952:XI §10, p.226),⁸⁾ 법 집행과정에 대한 체험은 교실에서의 강의식수업보다 다차원적인 법적 시민성을 육성하는데 효과가 더 크다. 경험적인 연구결과에 따르면, 법 관련 사회참여의 기회 제공(수사기관 견학, 재판과정 견학, 교도소, 소년원 방문 등)은 청소년의 비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법교육을 통해 법적 개념과 원리를 충분히 배우고 법 집행자들과 능동적인 상호교류를 경험하면, 그 만큼 비행을 덜 저지르게 된다는 점이다(Knepper, 1997:ix,12).

이처럼 법교육이 법적 분쟁의 해결능력, 법적 가치에의 신념, 자발적인 준법태도, 법률생활에의 참여 같은 법적 시민성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거의 제공하지 않고 있다.

법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기능은 크게 인지적 능력, 의사소통능력, 사회적 실천으로 분류될 수 있다. 3가지 기능과 그것들의 세부적인 내용은 <표 3>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8) 듀이의 말은 이론이 오직 경험 속에서 생생한 의미를 가지고 그 의미가 검증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경험은 많은 이론을 생성하고 포함할 수 있지만, 경험을 떠난 이론은 이론으로 포착될 수 없다는 것이다(Dewey, 1952: -§ 10, p.226).

〈표 3〉 법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3가지 기능

기 능	세 부 내 용
인지적 능력	법적 문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분석·해석능력, 구체적 상황에의 법 적용능력, 법과 관련된 정보의 비판적 평가능력, 법적 쟁점의 합리적 해결 능력,
의사소통능력	법적 문제에 대한 의견 표현하기, 타인과 의사소통하기, 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타인 설득하기, 법적 문제에 대한 합의 도출하기
사회적 실천	타인과 함께 법적 문제 해결하기, 법 집행과정의 체험(수사기관 견학, 재판과정 견학, 교도소, 소년원 방문), 작은 권리 찾기운동 참여, 인권관련 시민단체 견학

다. 가치 및 태도의 영역

실제의 법률생활에서 법적 시민성을 실천할 때 법과 관련된 인지적 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은 가치 및 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난다. 실제로 법적 시민성을 실천하는 시민을 기르려면, 법과 관련된 인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가치 및 태도를 가르쳐야 한다. 가치관은 개인이 일관성있게 행동하는 원천이고 행위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법 관련 가치관은 법률적 행위를 포함하여 사회적 행위를 선택하고 수행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일단 확립된 가치관은 쉽게 바뀌지 않으며 지속성을 갖는다. 이런 맥락에서 법교육은 학생들에게 법과 관련된 올바른 가치와 태도를 확립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법교육이 다차원적인 법적 시민성을 육성하려면 법의 개념과 원리의 이해, 법적 문제의 해결능력, 사회적 실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가치와 태도를 형성시켜야 한다. 법과 관련된 가치와 태도는 실제의 상황에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법을 준수하는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법치주의에의 확신, 기본권 존중, 법적 문제의 합리적 해결 태도, 준법 태도 등은 실제의 상황에서 법을 준수하는 행위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행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법교육에서 법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와 태도를 형성시켜주는 것도 중요하다. 사회과 교육에서와 마찬가지로(Woolever & Scott, 1988:199), 법교육에서도 가치와 태도를 가르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교사들이 의도하든 하지 않든 모든 교사는 어떤 가치와 태도를 가르치게 된다. 그렇다면 교사들이 잘못된 가치를 주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바람직한 가치와 태도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결국 특정한 가치와 태도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되지 않느냐고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것은 가치와 태도에 “대한 지식이나 이론”-예컨대 자유 또는 정의의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론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과 “관련된 가치와 태도”를 형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 교육과정에 그런 가치와 태도가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이 특정한 가치를 주입하

는 잘못을 범할 수 있으므로, 그런 잘못을 예방하기 위해 법 교육과정에 일반화된 법적 가치와 법 관련 태도의 형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서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1) 법적 가치

법교육이 법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시민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법 관련 가치를 내면화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추상적인 법률적 지식보다는 법 관련 가치 및 태도가 실제의 사회적 삶에서 시민들의 법률행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법 관련 가치를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주입해서는 안 된다. 법교육 프로그램은 법적 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토론과 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법 관련 가치와 태도를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법적 사례의 토론에서는 법적 쟁점과 관련된 가치문제를 분석하여 명료화하고, 가치와 행위수행 사이의 관계를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적 가치와 법적 문제의 해결 및 준법행위 사이의 연결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런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법을 준수하는 행위에 있어서 법 관련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과 관련된 바람직한 가치들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할 수 있을 것이다. 법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가치에는 법치주의, 자유, 평등, 정의, 인권, 관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2) 법 관련 태도

법치주의 사회에서 정의 또는 옳음의 문제는 법에 의해 규정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도 법에 의해 보장된다(Hegel, 1953: §208, §211 remark).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에서는 모든 시민들에게 정의와 권리의 원리로서의 법에 대해 가르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법치주의 사회에서 각 시민이 보편적인 정의와 권리를 충분히 인식하고 법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법 관련 태도의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법교육은 단순히 법률과 법적 문제에 대한 정보-즉, 법학적 지식-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법과 관련된 태도를 형성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법교육은 학생들에게 법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런 체험 프로그램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 법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 준법 태도, 법률생활에의 능동적 참여태도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실제로 법교육에 대한 경험적인 조사결과에 의하면, 법교육이 사회제도, 경찰, 학교 등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인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에 의거해 헨터(R.

Hunter)는 학생들이 법교육을 통해 법의 존재 이유, 법에 대한 존중, 부당한 규칙의 개정 능력을 배우게 되었다고 결론지었다. 더구나 법교육의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 성인, 건전한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는 경험은 학생들의 비행 가능성을 낮추고 법을 준수하는 태도를 형성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Hunt et al.,1997:40-41).

법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바람직한 법적 가치와 법 관련 태도의 세부적인 내용은 <표 3>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표 3〉 법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바람직한 법적 가치와 법 관련 태도

가치·태도	세 부 내 용
법적 가치	자유, 평등, 정의, 인권, 관용, 법치주의 등
법 관련 태도	타인의 권리존중 태도, 법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 자발적인 준법 태도, 법률생활에의 능동적 참여 태도 등

앞에서 편의상 가치와 태도를 분리해서 논의했지만, 실제로 가치와 태도는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법 집행과정에 대한 체험과 법적 분쟁해결에의 참여를 통해 학생들은 바람직한 법 관련 가치와 태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법교육의 3가지 내용 영역과 교육과정의 구성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이끌어내고 일상적인 법률생활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시민을 기르기 위해서는 법교육의 내용을 구성하고 서술하는 방식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즉, 법교육의 내용은 다차원적인 법적 시민성의 요소들을 고르게 포함할 수 있도록 먼저 쉬운 법적 사례 또는 판례를 제시하고 그 사례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에 대한 토론문제를 서술하고, 그 법적 쟁점을 해결하는 것과 관련된 법적 개념과 원리, 법 규정 등을 제시해야 한다. 그 다음에 법적 분쟁을 해결하거나 법 준수와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 집행과정의 체험에 대해 반성하고 그것에 대해 보고서 또는 법률서류 작성 같은 수행평가의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요약하면, 법교육의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기준과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1)법적 사례의 제시, (2)법적 쟁점에 관한 토론문제의 제시, (3)관련된 법적 개념과 원리, 관련 자료의 제시, (4)법 집행과정 또는 법적 분쟁의 해결과정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의 제공, (5)법 집행과정의 체험에 대한 반성과 토론문제의 제시, (6)수행평가의 방법 제시⁹⁾

결론적으로, 앞에서 논의했던 법적 시민성의 다차원성과 법교육의 3가지 영역을 구성하

9) 법 교육과정의 구성에서 (4)체험프로그램의 제공부터 (6)수행평가의 방법 제시까지는 각 세부 주제마다 제공할 필요는 없고 소단원의 정리 부분에서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면 될 것이다.

는 기준에 의거하여 법교육 교과서를 만드는 원리와 절차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지침은 법교육의 교육과정 구성기준과 원리에서 직접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것들이고, 다차원적인 법적 시민성의 육성에 초점을 맞춘 교과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1) 법교육의 교과서는 법학의 이론적 체계에 의거한 법률적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법적 시민성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구성되어야 한다.
- 2) 법교육의 교과서는 법학적 지식을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적 사례(문제)를 중심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 3) 법교육의 교과서는 토론수업이 가능하도록 주어진 법적 사례와 관련된 법적 쟁점 및 토론문제를 제시하는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 4) 그다음 법교육의 교과서는 주어진 법적 사례와 관련된 법적 개념과 원리, 법 규정을 제시해야 한다.
- 5) 법교육의 교과서는 법과 관련된 기능과 실천, 가치 및 태도를 실제로 체득할 수 있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 6) 법교육의 교과서에는 어려운 법적 개념과 원리를 쉽게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 관련된 판례, 주요한 법률 서식의 견본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7) 법교육의 내용 중에 기본권, 인권, 분쟁해결 영역은 가정-학교-직장-지역사회-국가 순으로 법률생활의 영역을 확장해가면서 권리와 의무, 기본 개념과 원리를 종합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8) 법교육의 교과서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흥미와 필요, 우리의 정치제도와 전통, 법의식을 충분히 고려하여 바람직한 법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IV. 맺 음 말

지금까지 법교육의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영역과 구성기준에 대하여 탐구해보았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제시한 법교육의 내용 영역과 교육과정 구성기준은 이상적인 법 교육과정의 모델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학생들의 흥미와 필요, 우리의 정치 제도와 상황, 법문화 등을 고려하여 법교육의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반영해야 할 하나의 기준이나 지침으로 제안된 것이다.

법교육이 단지 법학의 이론적 체계에 의거해 선정된 법률적 지식이 아니라 법적 분쟁의 해결능력, 법적 가치에 대한 신념, 준법 태도, 법률생활에의 참여 같은 법적 시민성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면, 법교육의 내용은 지식, 기능·실천, 가치·태도 등 다차원적

인 영역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법교육의 지적 영역에는 법의 이념, 법치주의, 인권, 기본권, 분쟁해결, 법문화 등 6가지 주제가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기능 및 실천의 영역에는 인지적 기능, 의사소통기능, 사회적 실천, 가치 및 태도의 영역에는 법적 가치-자유, 평등, 정의, 인권 등-와 법 관련 태도-기본권 존중, 준법, 법률생활에의 참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다차원적인 법적 시민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기르기 위해서 법교육의 내용은 먼저 법적 사례 또는 판례를 제시하고 그 사례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에 대한 토론문제를 서술하고, 법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개념과 원리, 법 규정 등을 제시해야 한다. 그 다음에 법적 분쟁을 해결하거나 법 준수와 관련된 체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 집행 과정의 체험에 대해 반성하고 그것에 대해 보고서 작성이나 법적 서류 작성 같은 수행평가의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법 교육과정이 학생의 흥미, 일상적인 법률생활에서의 필요와 유용성에 근거하여 사례중심의 토론수업이 진행되도록 구성된다면, 법교육이 법적 가치에 대한 신념을 갖고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시민을 육성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법교육은 긍정적인 법의식을 확산시키고 법치주의와 바람직한 법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렇게 법교육의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교육과정의 연구와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전지히 반성하고, 법 교육과정이 다차원적인 법적 시민성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민주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법 교육과정의 개정안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현장 교사들을 연구에 참여시키고, 연구단계에서부터 학생들과 현장교사들의 요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법교육 전문가와 법률가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교육부(1997). 사회과 교육과정 (별책7).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 김범주 외(2002). 법과 사회(고등학교). 서울: 교학사
- 김왕근(1999). 세계화와 다중 시민성 교육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시민교육연구」 제28집. pp.45-69.
- 박상준(2002). 「행위성향 중심의 시민교육: 규칙 따르기로서의 사회적 행위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2003a). 헤겔의 시민사회론과 법교육에의 함의.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사회과교육」 제42권 1호. pp.165-182.
- (2003b). 법교육의 방법으로서 사례중심 토론수업.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사회과교육」 제42권 2호. pp.211-230.
- 박성희(1997).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교육학 연구 59). 서울: 문음사
- 박성혁(2003). 한국인의 법의식과 시민교육의 방향. 손봉호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시민사회와 시민교육」. pp.235-251.
- 이철희(2002). 「판례중심 법교육이 고급 사고력 신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조효남(1996). 「사례중심의 교수·학습이 법 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차경수(1997). 「현대의 사회과교육」. 서울: 학문사.
- 최종고(1989). 「한국법사상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한국법제연구원(1994). 「94국민법의식조사연구」. 연구보고 94-3. 1994. 10.
- 한국청소년개발원(1995). 「청소년 생활법률의 이론적 기초(수련거리 개발보고 9)」. 1995. 12.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7). 「사회계층과 범죄발생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96-11. 1997.
- American Bar Association Special Committee on Youth Education for Citizenship(1995), Essentials of Law-Related Education: A Guide for Practitioners & Policymakers, [on-line] http://www.abanet.org/publiced/insights/lre_essentials.pdf. (2003. 4.)
- Banks, J.A.(1990), Teaching Strategies for the Social Studies, 4th ed., New York: Longman
- Blasi, A.(1980), "Bridging Moral Cognition and Moral Action", Psychological Bulletin, Vol.88, No.1.
- Dewey, J.(1952), Democracy and Education / 이홍우 역(1987), 민주주의와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Hegel, G.W.F.(1953), *Hegel's Philosophy of Right*, T.M.Knox, trans., London: Oxford Univ. Press
- Knepper, P.(1997), "Three Decades of Law-Related Education", Williamson, D. et al. eds., *Law-Related Education and Juvenile Justice: Promoting Citizenship among Juvenile Offenders*, Springfield: Charles C. Thomas Pub
- Hunt, S., Williamson, D., Addington, C.(1997), "Law-Related Education: Bringing Practice, Theory, and Research Together", Williamson, D. et al. eds., *Law-Related Education and Juvenile Justice: Promoting Citizenship among Juvenile Offenders*, Springfield: Charles C. Thomas Pub.
- Lemlech, J.K.(1990), *Curriculum and Instructional Methods for the Elementary School*, New York: Macmillan Pub. Co.
- Tocqueville, Alexis de(1990),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Random House
- Woolever, R.M & Scott, K.P.(1988), *Active Learning in Social Studies: Promoting Cognitive and Social Growth*, Boston: Scott, Foresman and Co.
- Zippelius, R.(1965), *Das Wesen des Rechts* / 이재룡 역(1999). 『법의 본질』. 서울: 길안사

• 논문접수 : 2003년 10월 15일 / 수정본 접수 : 2003년 11월 22일 / 게재 승인 : 2003년 12월 4일

ABSTRACT

A Study of Curriculum Guidelines in Law-related Education

Sang-Joon Park

(Lecture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is to study of curriculum guidelines in law-related education(LRE) for bring up multiple law-related citizenship. The curriculum of LRE is to consist of knowledge, skills and its practice, value and attitude. The knowledge sphere of LRE has to be composed of subjects like as ideal of law, rule of law, human right, basic right, solving of law-related conflicts, culture of law. The skills and its practice sphere of LRE include cognitive ability, communication ability, and social participation. The value and attitude sphere of LRE contain belief in rule of law, respect of basic right, attitude of law-abiding.

Key Words : law-related citizenship, rule of law, consciousness of law, case-based discussion in law-related education, expanding communities approach